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5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합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After

직계존속

최대 1억 원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구분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최대 공제율
	현행	개정안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3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7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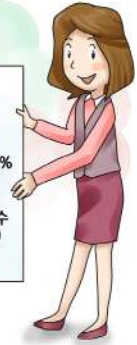
Before

기획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지방투자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획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After

- (대상) 기획발전특구 내 창업 (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4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43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그동안 신용대출에 대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운영중이었습니다.



After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가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5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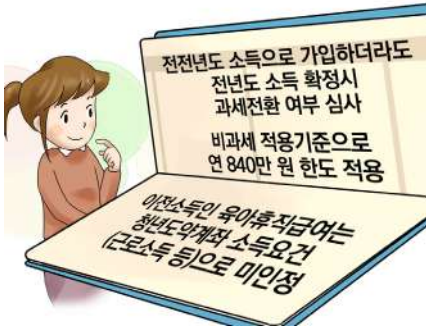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44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After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지원을 강화합니다.



6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45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Before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After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가족



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53

늘봄학교 본격 도입

시행일: 2024년 3월

Before

지금까지 교육격차 해소 및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After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합니다.



2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5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시행일: 2024년 3월 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정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3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1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꾸준하게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중위 60% 이하 (자녀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지원금액) 월 20만 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금액) 월 35만 원

After

앞으로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 중위 63% 이하 (자녀연령)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지원금액) 월 21만 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자녀 연령	지원 금액
0 ~ 1 세	40 만 원
2세 이상	35 만 원



4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2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23)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75% 이하	85%	75%
120% 이하	60%	20%
150% 이하	15%	15%
150% 초과	.	.



After

앞으로도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24)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0-5세	6~12세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 10%추가 지원
120% 이하	60%	30%	
150% 이하	20%	15%	
150% 초과	.	.	



5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3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행일: 2024년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약 6만 명
- 지원내용 :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비
- 지원액(연간) :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

6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4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행일: 2024년 3월 1일

Before

고립·은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합니다.

After

- (지원 대상)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9~19세) 및 그 가족
- (지원내용) 방문 상담, 방문 학습, 치유프로그램, 자립 지원 등



7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5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6개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3년)

After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 회복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 신규 배치하여 많은 청소년을 대기 없이 신속 지원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1년)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5년)

8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6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시행일: 2024년 하반기

Before

지금까지 스톡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 시행
6개 시·도 운영

After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사업운영기관 전국 17개 시·도 확대

24시간 운영 및 주거지원 시설 내 안전장비 구축

8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67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현재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에 일정기간
입소후 퇴소한 경우 피해자 본인에 한해 자립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fter

내년부터는 동반 아동에 대해서도 1인당 25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고용



1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꾸준하게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기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천 원
2023년 주거급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급지·가구별 16만 4천 원~ 62만 6천 원 수준
2023년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After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기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 4천 원 (+21만 3천 원)
2024년 주거급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급지·가구별 17만 8천 원~ 64만 6천 원 수준(+1만 1천 원~2만 7천 원)
2024년 교육급여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8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자살예방, 정신건강, 청소년 등 상담·신고
번호가 분산되어 안내되었습니다.



After

이제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가 기억하기도 쉽고
긴급성을 담은 '109'로 바꿉니다.



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9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 0세반 정원 3명, 현원 2명 가정 >

(원칙) 현원 아동당 지원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지원

After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 0세반 정원 3명, 현원 2명 가정 >

(원칙) 현원 아동당 지원

(추가) 영아반 인센티브 도입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 인센티브(기관보육료) 1명분

4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After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5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3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종전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After

앞으로는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6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4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기존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 ~ 300만 원



After

앞으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 ~ 450만 원



7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5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잠정)

Before

그동안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After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8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는 다소 제약이 있었습니다.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현도를 구입



· 임대비의 20%

Aft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인정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현도를 구입

· 임대비의 40%로 확대

9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7

안전동행 지원사업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21년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명	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기간	'21년 ~ '23년(3년간)
지원조건	소요비용의 50% (최대 7천만 원~1억 원)
지원대상	(위험기계 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노후 안전검사기계 6종 (위험공정 개선) 부리산업, 제조업 기업·추락 고위험 3대 업종

After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합니다.

사업명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기간	'24년 ~ '29년(6년간)
지원조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소요비용의 50%(최대 1억 원)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소요비용의 40%(최대 8천만 원)
지원대상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제조업 중 부리공정,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사외 하청사업장

10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8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Before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이 건축법령과 상이하여 두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령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까지 수평거리 50m 이하
건축법령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보행거리 5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보행거리 75m 이하
	무인화 공장 보행거리 100m 이하

After

앞으로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0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시행일: 2024년 5월

우리나라 주도의 최초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출범

아프라스

식품 안전 분야 국제협력

(연대 강화, 수출지원)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외국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규제장벽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해소,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 등을 통해 수출지원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 세계 최초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되어 내년 5월 서울에서 각국의 규제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아프라스' 회의를 개최합니다.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1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해 마약류 상담을 전담하는
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23.9.27'부터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After

시간·공간적 제약없이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운영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2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청소년·취약계층 등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교육이 확대됩니다.

마약과 끝낼 신호, SOS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3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접수시작일: 2024년 5월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의료기기 업체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문화·체육·관광



1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52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4년 2월 1일

Before

꾸준하게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하였습니다.



After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58만 명,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53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시행일: 2024년 3월 22일

Before

그동안 게임물 내에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규정은 없었습니다.



After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정보공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됩니다.



3 문화재청

자세한 내용은 p.1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Before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용어 및 분류체계를 사용·운영하여 왔습니다.



After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환경·기상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66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시행일: 2024년 5월

Before

고동안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전국 75개 홍수특보 지점을 관리하였습니다.



After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하여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합니다.



2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67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4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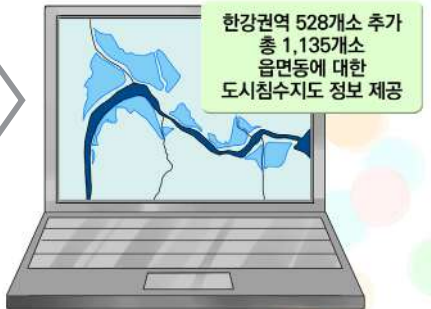
Before

집중 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내수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After

홍수재해 위험에 대비해 한강권역을 포함한 도시침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68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시행일: 2024년 6월 1일

Before

배출권의 이월제한 기준은 순매도량만큼 다음 이월년도로 이월할 수 있었습니다.



After

이제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합니다.



*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배출권 전량 이월 가능합니다.

4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69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Before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절차 및 기준이 경직되게 운영된 면이 있었습니다.



After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0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합니다.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재활용 기준 및 방법 등

After

신속처리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내 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안전성 시험·검증)

임시허가
(최대 2년까지 임시
시장 출시 가능)

6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1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종전에는 개별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순환자원을 인정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개별 사업자 신청 없이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을 일괄 지정·고시합니다.



7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2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지금까지 반도체 업종에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시설기준 일괄 적용

After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적용됩니다.



제조설비 내 배관에 대해 국제기준 인증 인정

설비 내 안전장치를 시설기준으로 인정

안전장치를 갖추고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 기준 적용

8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3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Before

기존에 팔공산은 도립공원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관리체계 이원화(대구, 경북)

도립공원(1980년 지정) 당시 탐방로 등 기본시설 조성

멸종위기종 관리체계 부존재

After

팔공산이 신규 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됩니다.



관리체계 일원화(국립공원공단)

노후시설 전면개선 및 다양한 탐방·체험인프라 조성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설정

9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4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촉진 제도」 시행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Before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촉진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유기성폐자원 발생·처리량 중 일정비율을 생산목표로 부여,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달성 가능해집니다.

After

구분	공공	민간
시행	'25 ~	'26 ~
의무 생산자	전국 지자체	유기성폐자원 대규모 배출·처리자
바이오 가스화 대상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생산목표 (5년 주기 재설정)	발생·처리량의 50%	발생·처리량의 10%
달성방법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 (공공은 실적 거래 시, 거래로 구입한 생산실적의 90%만 인정)	

10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84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중

국내 해역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에 대한 감시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을 확대합니다.

구분	정기조사 (정밀분석)	긴급조사 (신속분석)
조사정점	52개	75개
조사대상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해수
조사항목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세슘, 삼중수소



구분	정기조사 (정밀분석)	긴급조사 (신속분석)
조사정점	60개	105개
조사대상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해수
조사항목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세슘, 삼중수소

11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85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시행일: 2024년 2분기

Before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우리 해역으로의 방사능 물질 유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After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실시

조사 대상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
조사 주기	연 2회(상·하반기)
조사 항목	세슘, 삼중수소



12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187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Before

기존에는 데이터 위주의 기후통계 및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제공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지도 기반으로 쉽게 조회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추세 및 미래 전망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202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시행일: 2024년 5월 1일

Before

그동안 모든 발전설비는 전력시장 거래가 원칙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이 불가능했습니다.



After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청

자세한 내용은 p.21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되었습니다.



After

현장 연구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발명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3 특허청

자세한 내용은 p.215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시행일: 2024년 5월 1일

Before

등록되어 있는 상표 또는 먼저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출원하더라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After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 제외.

4 특허청

자세한 내용은 p.216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잠정)

Before

그동안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의 신청 대상이 한정적이었습니다.



After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국토·교통



1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23

GTX-A 개통

시행일: 2024년 3월

Before

지금까지 지하철 버스 기준으로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길었습니다.



수서~동탄 79분 소요
(지하철, 버스 기준)
파주 운정~서울역 50분 이상 소요
(지하철, 버스 기준)

After

GTX-A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 시대가 본격 개막됩니다.



수서~동탄 19분 소요
(3월 수서~동탄 개통)
운정~서울역 20분 소요
(연말 파주 운정~서울역 개통)

2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24

출산가구에 특별(우선)공급 도입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Before

중전에는 혼인가구 중심으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혼인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제공

After

출산가구에 주택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됩니다.



자녀 출산 시 특별(우선)공급 제도 신설

3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25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시행일: 2024년 3월 25일(예정)

Before

그동안 주택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동일한 날에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After

동일 일자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부가 동일한 날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 인정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음
청약통장을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



4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26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시행일: 2024년 5월

Before

현행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지원되고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수반되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	일일	~2천 원	2~3천 원	3천 원~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 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After

K-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된 적립률로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K-패스

대중교통	K-패스	적립률	예)1,500원 기준
일반		20%	30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이동거리 무관(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1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247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시행일: 2024년 상반기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을
신규 개장합니다.

• 국내 최초로 부두 내 전 구간(안벽-이송-야드)을
무인·자동화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이 신규 개장됩니다.

- 국내 최초 부두 내 전구간(안벽-이송-야드) 완전자동화
- 현장 무인 작업을 통한 항만 안전성 및 생산성 제고
- 연간 195만TEU 이상의 물동량 처리능력 추가 확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농림·수산·식품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0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시행일: 2024년 3월 29일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공간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난개발이 방지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중장기계획수립

농촌특화지구도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지원

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1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시행일: 2024년 2월

Before

종전에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초지
지급 요건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로 한정

After

앞으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합니다.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

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시행일: 2024년

Before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

(규모) 9천 명



After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

(규모) 3만 명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3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시행일: 2024년 3월 (예정)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왕진버스)를 도입합니다.

- 병의원, 의료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시행일: 2024년 4월 27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하여 합격 여부 결정합니다.



6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5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5일

Before

지금까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으로 한정적이었습니다.



2인 이상 동물병원

After

앞으로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을 확대합니다.



모든 동물병원

7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6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시행일: 2024년 1분기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간물떼기
(15만원/ha)

논물 알게 걸러대기
(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저메탄사료 급여
(2.5만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여
(0.5만원/두)

8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7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행일: 2024년 7월 26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였습니다.



9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8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시행일: 2023년 12월 13일

Before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 이라서, 인근 농가로부터의 흩날림 등에 의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After

선의를 피해농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개선합니다.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이어야 하고, 잔류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 mg/kg 이하일것

10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79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시행일: 2024년 3월

Before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소농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fter

중소농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1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0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시행일: 2024년 2분기

Before

종전에는 경영이양직불 사업을 운영 시행하였습니다.



가입연령	65~74세
지급기간	75세까지
이양방식	매도 또는 임대
지원금액	연간 매도 330만 원/ha, 임대 250만 원/ha
경작허용면적	3천㎡ 이하
운영방식	농지연금 미연계

After

앞으로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가입연령	65~79세
지급기간	84세까지
이양방식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지원금액	연간 매도 600만 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 원/ha
경작허용면적	1천㎡ 미만
운영방식	농지연금 연계

* 매도 조건부 임대 :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종료 후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

1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1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시행일: 2024년 4월

Before

지금까지 '음식점업'은 고용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fter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됩니다.



1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2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앞으로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항목을 다양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

메뉴판 다양화: (기존) 2개 부류 15개 항목 → (변경) 3개 부류 32개 항목
 지원규모 확대: (기존) 43개소(예산 44억 원) → (변경) 325개소(예산 328억 원)

구분	사업 메뉴	
기본 조성	기존	수출컨설팅, 수출전문인력 양성, 제품개발(기술도입), 포장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인종등록, 상품등록운송
	신설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해외기업 신용조사, 온라인 수출상담회, 정기시장채 보급, 공동브랜드 포장채 지원, 공동 선별 지원, 환안·공향 부대비용
마케팅 강화	기존	홍보콘텐츠 제작, 현지시장조사, 국제식품위생허위 참가, 개별바이어 초청, 유통업체 판촉, 온라인 판촉, 미디어 홍보, 소비자 체험홍보
	신설	마켓테스트, 기획바이어 그룹 초청 및 생산현장 방문여, 온라인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현지화 지원	신설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수출용 자료),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주류마켓 및 온라인별 신규 입점비, 지자체 사업(공유오피스 임차료, 임시차 고율 등)

1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3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행일: 2024년 1월 2일 공포(잠정), 2025년 1월 3일 시행(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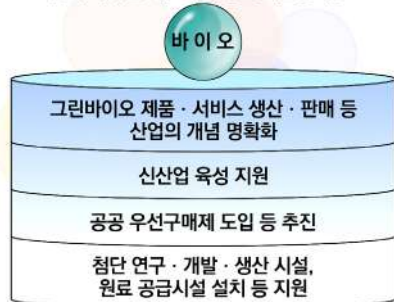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15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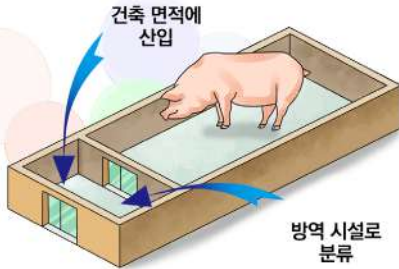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284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Before

지금까지 전실은 방역시설에 해당하여 축산 농장의 건축 면적 산정 시 전실 면적도 포함되었습니다.



After

앞으로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축산 농장의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은 미산입됩니다.



16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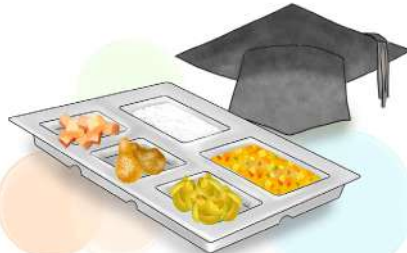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285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대학생에게 쌀·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밥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



'23년 지원 예산 및 규모 : 2,501백만 원, 233만 명

After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24년 지원 예산 및 규모 : 4,316백만 원, 397만 명

17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6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꾸준하게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작물을 지원하였습니다.

동계작물	밀,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50만 원/ha)
이모작	논콩·가루쌀(100만 원/ha) 하계조사료(430만 원/ha)
하계작물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시 ha당 100만 원 추가지급

After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동계작물	밀,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50만 원/ha)
하계작물	두류·가루쌀(200만 원/ha), 하계조사료(430만 원/ha), 옥수수(신규, 100만 원/ha) * 기존 논콩에 녹두, 장두, 완두, 팥을 포함하여 대상 품목 두류로 확대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시 ha당 100만 원 추가지급

18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7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시행일: 2023년 12월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을 추진합니다.

-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합니다.
- 온실가스 : 지구 온난화 지수
이산화탄소(CO₂) 1 < 메탄(CH₄) 21 < 아산화질소(N₂O) 310



19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8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시행일: 2024년 4월 25일

Before

그동안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유통기한



After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위해 앞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유통기한 경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89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그동안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이 변경됩니다.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적용
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적용
• CODEX 기준
• 유사축종 최저기준
• 평균제 0.01 mg/kg 이하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적용
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0.01 mg/kg 이하로 일괄 적용
※ 단, 성장보조제(성장촉진호르몬제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
※적용대상: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21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324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어업인 등 수산업계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꾸준히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가구당 경영비	'23년
~ 2억 원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2억 원 ~ 5억 원	2억 원 + 2억 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5억 원 ~ 10억 원	4억 5,500만 원 + 5억 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10억 원 ~	8억 3,000만 원 + 10억 원 초과 소요액의 65%까지 가산

After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어업경영자금 융자 비율을 상향합니다.

가구당 경영비	'24년
~ 2억 원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2억 원 ~ 5억 원	2억 원 + 2억 원 초과 소요액의 95%까지 가산
5억 원 ~ 10억 원	4억 8,500만 원 + 5억 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10억 원 ~	9억 1,000만 원 + 10억 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22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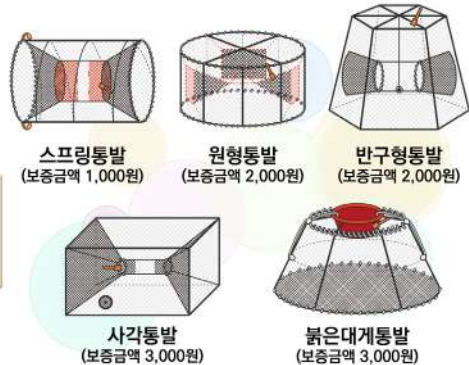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325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어구보증금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 통발 종류별(스프링, 원형, 반구형, 사각, 붉은대계) 어구보증금액 포함하여 판매하고 사용 후 반납할 경우 보증금액을 반환합니다.



23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326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지금까지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는 영세 어업인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120만 원 지급



After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

130만 원 지급



24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327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시행일: 2024년 4월

Before

종전에는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만 45세 이상
1,800명

국가 90%지원
자부담 10%

After

앞으로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합니다.

만 51세 이상
전체 여성어업인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40% 지원,
자부담 10%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국방·병무



1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344

2024년 병 봉급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하였습니다.



'23년 병 봉급

구분	봉급액 (원)
병장	1,000,000
상병	800,000
일병	680,000
이병	600,000

After

'24년도에도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됩니다.



'24년 병 봉급

구분	봉급액 (원)
병장	1,250,000
상병	1,000,000
일병	800,000
이병	640,000

2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345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병사 전역 시 사회진출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After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인상합니다.



3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346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초급간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단기복무 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인상되고 주택수당이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 존〉
· 단기복무 장려금(장려수당)

구 분	봉급액(만원)
(장교)장려금	900
(부사관)장려수당	750

-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 지급 제외

〈변 경 (24년)〉
· 단기복무 장려금(장려수당)

구 분	봉급액(만원)
(장교)장려금	1,200
(부사관)장려수당	1,000

-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



4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347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됩니다.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여, 방상내·외피 등 동계피복과 교대·중복직임을 통해, 동절기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5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350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이 금지됩니다.

·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6 방위사업청

자세한 내용은 p.359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시행합니다.

- 계약의 특례 범위 확대
- 지체상금 부과 및 감면 관련 규정 개선
-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확대
- 핵심기술 등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신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및 사유 확대
-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 신설
- 기타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개선



7 방위사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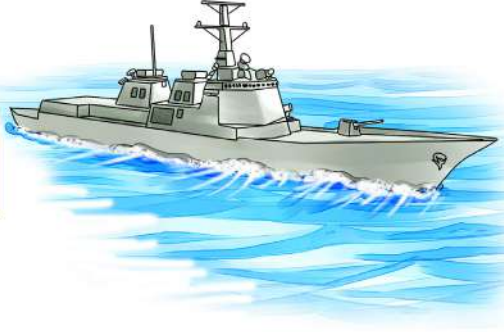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360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시행일: 2024년 3월 1일(예정)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가 적용됩니다.

- 조선소가 해외 선급을 통한 감리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동안 군함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가 도입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행정·안전·질서



1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369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25일

Before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 한정
신상공개 대상자	피의자에 한정
강제촬영 여부	동의없는 ‘머그샷’ 촬영 및 공개 불가능



After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내란·외환죄 폭발물사용죄 중상해·특수상해죄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신상공개 대상자	피의자 및 피고인
강제촬영 여부	공개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 공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보관 중인 사진·영상물 활용 가능 ‘머그샷’ 강제 촬영, 공개 가능



2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370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Before

기존에는 스톱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미리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 부존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불비



After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하여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국선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도입



3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376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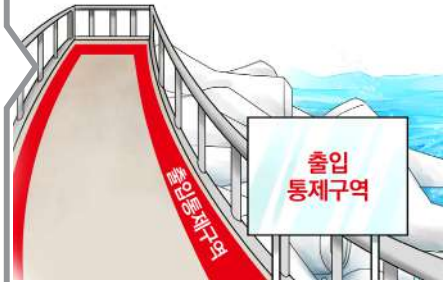
Before

그동안 항만시설 내 위험구역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4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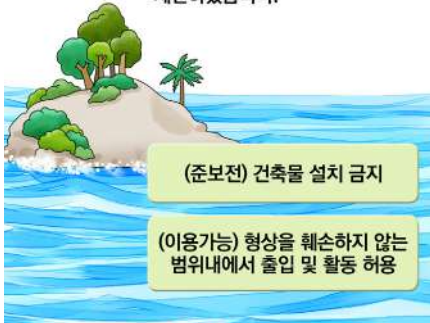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377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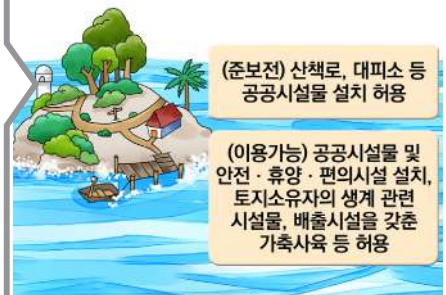
Before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 무인도서 관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이 완화됩니다.



5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381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시행일: 2024년 상반기

Before

현 세대주의 전입신고 시 전입자 또는 전 세대주 중 한 명의 확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됩니다.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6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382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시행일: 2024년 1분기

Before

지금까지 교통위반 신고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관리하였습니다.



행안부 '안전신문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After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됩니다.



타 민원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차분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법제처

자세한 내용은 p.385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시행일: 2023년 11월 21일

Before

종전에는 과도한 학력기준으로 인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After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력기준이 완화됩니다.



8 국민권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410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Before

그동안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After

국민 누구나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도 상향됩니다.

